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촉구하는결의안

議案 番號	1092
----------	------

發議年月日：1998. 7. 10.

發議者：朴寬用外 21人

主 文

대한민국 국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난 세기의 민족사의 잔재인 남북간의 대결과 반목이라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민태가 없음을 인식하여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 서고자 한다.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아직도 남아 있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 대결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안타까움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분단이후 1985년 단 한차례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만 있었을 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1세대들의 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

도적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이산가족교류라는 인도적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산가족문제이기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같은 민족적·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의회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응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一.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극복을 위하여 이산가족이라는 핏줄이 서로 상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提案理由

조국의 광복에 이어 발생한 국토분단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남북한에는 1천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오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1991년 2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남북한 관계가 여의치 못하여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UN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민간차원에서 적십

자사를 통한 구호물자지원등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 이산가족의 소망인 생사확인이나 교류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제3국을 통한 비공식적인 재회나 연락(1990년 이후 1998년 6월 30일까지 생사확인 1,175건, 서신교환 4,305건, 상봉 192건)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이산가족 개인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최근 냉전시대의 종료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일본인처 고향방문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의 민족인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제의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